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01호
2017. 3. 13

정책동향

- 건설기술자 고령화 동향과 정책 과제
- 사업 규모별 건설 재해 현황 및 시사점

시장동향

- 주택금융시장 동향

산업정보

-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과 향상 방안
- 건설기업 정도 경영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실천 과제

건설논단

- 건설사 희비 가르는 해외 플랜트 미청구공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기술자 고령화 동향과 정책 과제

- 현장 기술 단절 막기 위해 청년층 건설기술자 유입 촉진하는 인센티브 대책 필요 -

■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건설산업의 미래 좌우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People Business'로 건설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기업, 나아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건설업의 이러한 특성은 건설 수주를 위한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ation) 평가 항목 등에서도 잘 나타남. 즉, 건설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 프로젝트의 수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더욱이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F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다양한 다자간 및 쌍무 협정의 증가로 점차 시장의 장벽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산업 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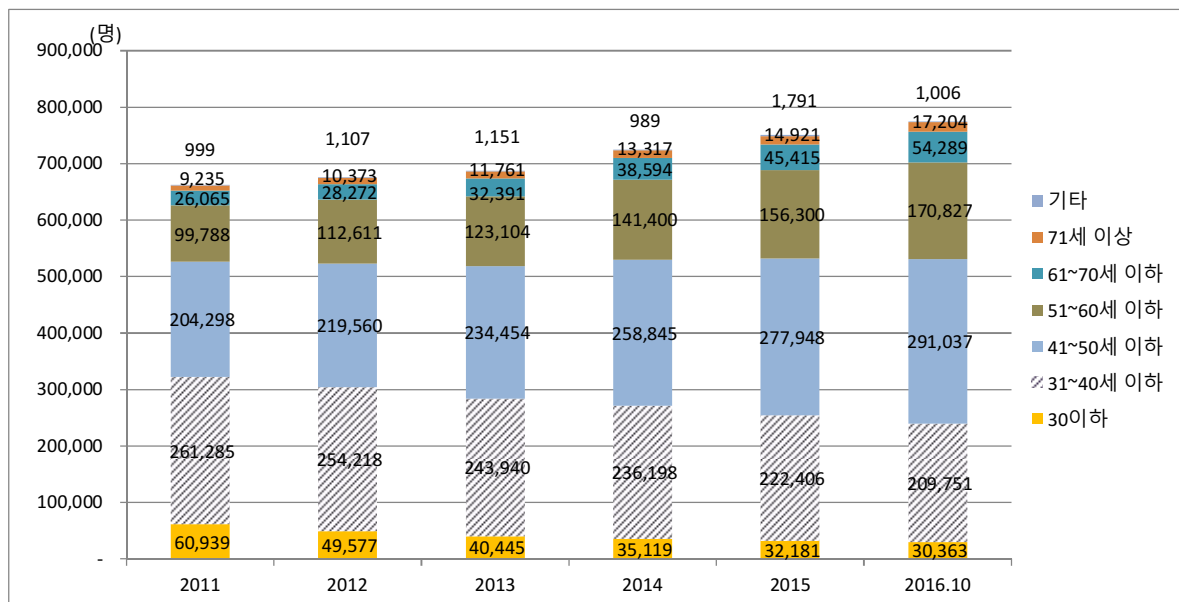
■ 전체 건설기술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40세 이하 기술자들의 수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전체 건설기술자 수는 2011년 66만 2,60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10월에는 77만 4,477명을 기록, 지난 6년간 16.9%나 증가함. 그러나 증감 추이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어 30~40대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장년층 인력은 꾸준히 증가함.
 - 지난 6년간 30세 이하 청년층 건설 기술자들의 추이를 보면, 2011년 6만 939명으로 전체 건설 기술자의 9.2%를 차지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10월에는 3만 363명으로 3.9%에 불과함. 이는 2011년에 비해 50.2%(3만 576명)나 감소한 수치임.
 - 31~40세 건설기술자들의 감소세도 만만치 않아 2011년 26만 1,285명으로 전체 기술자의 39.4%를 차지하던 것이 2016.10월에는 20만 9,751명, 27.1%를 차지하여, 전체 기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것은 물론, 기술자 수 자체도 2011년 대비 19.7%(5만 1,534명)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주력 건설기술자, 30대(31~40세)에서 40대(41~50세)로 전환

- 청년층 기술자 유입의 지속적인 저조는 건설 기술자의 연령대별 구조를 변화시킴. 이에 따라 2013년까지 30대(31~40세) 기술자들이 주를 이루던 것이 2014년을 기점으로 40대(41~50세)가 주력 기술자로 등장함(<표 1>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6년간 30대 건설 기술자들이 무려 12.5%p나 하락한 것과는 달리, 40대 건설 기술자들은 2011년 30.8%(20만 4,298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10월에는 37.6%(29만 1,037명)로 2011년 대비 7.6%p 증가함.
- 또한, 50대(51~60세) 건설 기술자들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15.1%(9만 9,788명)이던 것이 2016.10월에는 22.1%(17만 827명)을 차지함. 이에 따라 2016.10월을 기준으로 전체 건설기술자의 68.9%가 40세 이상 기술자들인 것으로 나타남.

< 표 1 > 건설 기술자 연령별 추이(2011~2016.10)



주 : 기타는 외국인 등 연령이 불확실한 경우임.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내부자료

■ 경쟁력 유지를 위해 청년층 건설기술자의 산업내 유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대책 시급

- 대학 토목 및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숫자가 여전히 증가세인데도 불구하고¹⁾ 산업 내 청년층 기술자의 유입이 지나치게 낮은 데에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성향, PQ등 입낙찰 제도의 영향, 그리고 청년층 취업 지원 정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정부는 인턴십 지원, 세제상의 혜택 등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 부작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기술자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1) 동향브리핑 595호(2017. 1. 23.), “4년제 대학 토목·건축 관련학과 취업 동향과 정책 과제(김민형)”의 내용을 참조할 것.

사업 규모별 건설 재해 현황 및 시사점¹⁾

- 소규모와 대규모 건설 사업장 재해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 -

■ 국내 건설안전 관련 제도는 대규모 사업장에 편중

-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관한 제도는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사업장은 최소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0m² 이상인 건축물 등 대부분 대규모 혹은 공공 시설물임.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규모 혹은 공공 시설물로 국한되어 있음.
- 본고에서는 국내 전체 및 건설 재해 통계 자료(2011년~2015년)²⁾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규모별 건설 재해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업 규모별 건설 재해 비교·분석 결과

- 4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건설산업의 재해천인율 및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보다 높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설산업이 전체 산업보다 낮음(<그림 1>, <그림 2> 참조).
 - 최근 5년(2011년~2015년) 평균 사업 규모별 재해천인율 분석 결과를 보면, 1~9인 건설사업장의 재해천인율(25.7‰)이 전체 산업(11.1‰)보다 2.3배 높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대로 전체 산업의 재해천인율(1.8‰)이 건설산업(0.3‰)보다 6.1배 높음.
 - 사업 규모별 사망만인율 분석 결과, 1~9인 건설사업장의 사망만인율 4.4‰는 전체 산업의 1.6‰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대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산업의 사망만인율은 0.7‰로 건설산업의 0.3‰보다 2.8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대규모(1,000인 이상)와 소규모(1~9인) 사업장의 재해 및 사망률 차이는 매우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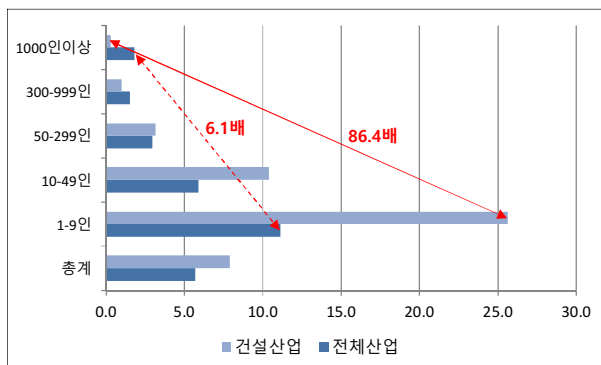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최수영 외 2인(2017),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2) 본고에 사용된 국내 재해 데이터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수집한 통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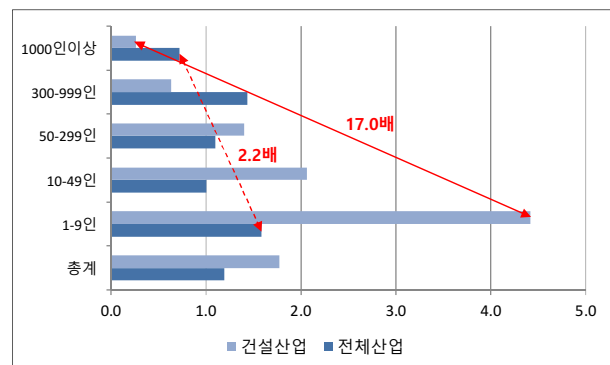
각한 수준임.

- 건설산업 소규모 사업장 재해천인율(25.7‰)은 대규모 사업장(0.3‰)보다 86.4배 높으며, 두 집단 간의 사망만인율 차이(소규모 사업장 4.4‰, 대규모 사업장 0.3‰)는 17배 수준임.
- 전체 산업에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재해 및 사망률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건설산업에 비해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두 집단 간의 재해천인율 차이는 6.1배, 사망만인율 차이는 2.2배임).

<그림1> 사업 규모별 재해천인율



<그림2> 사업 규모별 사망만인율



- 미국 건설산업도 대규모 현장보다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내 건설산업과 같은 심각한 편차는 보이지 않음.
- 2010~2014년 5년 평균 미국 건설산업 10인 이하와 1,000인 이상 사업장 재해천인율 차이는 6.5배로 조사됨³⁾. 특이한 점은 미국 전체 산업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대규모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 규모별 건설 재해 양극화가 주는 시사점

- 국내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재해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안전 예산 및 교육 등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국내 1~9인 건설 사업장 수는 2015년 기준 약 33만개로 1,000인 이상 사업장 203개보다 약 1,600배 많으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5배 높은 수준임. 이는 전국으로 산재(散在)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 자원의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함.
-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및 사업 여건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확실적인 통제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3) 미국 건설산업 재해 데이터는 미국 노동통계국(BL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수집함.

주택금융시장 동향

- 가계 신용 증가, 금리 인상에도 연체율은 안정적 -

■ 4/4분기 주택 담보대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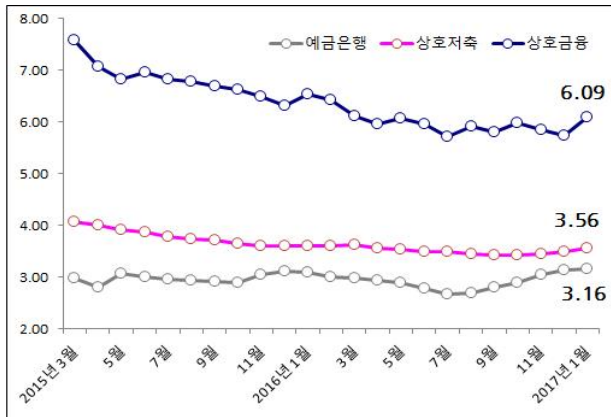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가계 신용은 1,344.3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3.7% 증가함.
 - 2016년 들어서는 매 분기 증가율이 확대됨. (1분기 1.7% → 2분기 2.8% → 3분기 3.1%)
 - 2016년 한 해 동안 가계 신용은 141.2조원 증가하여 전년 117.8조원 증가에 비해 증가액이 확대됨.
-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하듯 가계 대출과 판매 신용 모두 증가세가 확대됨.
 - 전 분기 대비 가계 대출은 3.5% 증가하여 3분기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예금 취급 기관(3.1%)에 비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4.9%)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가계의 카드 할부 사용금액인 판매 신용은 7.1%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나타냄.
- 예금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증가폭이 확대됨.
 - 예금은행은 금리 인상,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4/4분기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액이 9.0조원에 그쳐 지난 분기 13.4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됨.
 - 반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주택 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증가액이 7.9조원에 이룸. 지난 분기 3.7조원의 두 배 수준임.

■ 주택 담보대출 금리 상승세 지속

-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그림 1>과 같이 2016년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7년 1월 현재 상호금융권은 6%를 상회하는 수준임.
 -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2016년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2017년 1월 현재까지 6개월 연속 상승함. 2016년 7월 2.66%로 최저 수준을 형성한 이후 2017년 1월은 3.16%까지 상승함.
 - 상호저축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2016년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7년 1월 현재 3.56%까지 상승함.
 -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현재 6.09%로 조사됨.

<그림 1> 주택 담보대출 금리(연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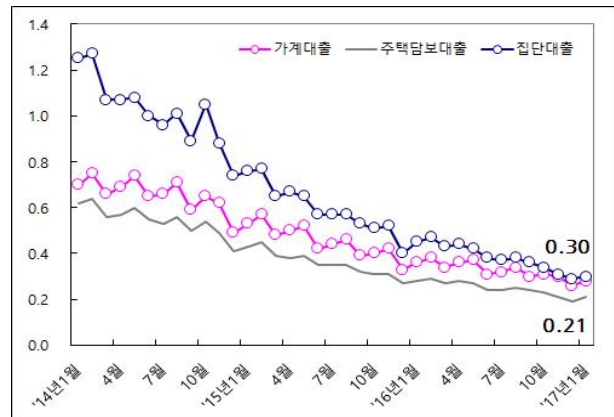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연체율 추이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연체율 통계 이래 최저 수준 유지

- 주택금융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 연체율은 현재까지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유지함(<그림 2> 참조).
 - 2017년 1월 가계 대출 부문 연체율은 전체 0.28%, 주택 담보대출 0.21%, 집단 대출 0.30%임.
 - 기업 대출 연체율이 0.73%(대기업 0.71%, 중소기업 0.74%)인 점을 고려하면, 가계 부문 대출의 건전성은 대기업에 비해서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리 인상, 주택 가격 변동, 가계 대출 규모의 변화 등에 시차를 두고 후행하여 연체율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음. 또한 가계 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비율인 연체율을 하락시킨 측면도 존재함. 따라서 가계 대출의 연체 및 부실 채권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함.

다양한 맞춤형 주택금융 정책 필요

- 올 한 해 주택금융 시장 관련 위험 요인이 확대되면서 주택금융 정책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분양이 완료된 집단 대출 등 이용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운영이 필요함.
 - 3.13.부터는 상호금융권의 주택 담보대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 이에 따라 소득 증빙 자료 제출 및 주택 구입 자금용 신규 대출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 상환해야 함.
 - 한국주택협회의 중도금 집단 대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18일부터 1월 말까지 신규 분양 단지 52곳 중 집단 대출 협약이 완료된 단지는 15곳에 불과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

-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조직에 부정적 태도 더 강해 -

■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날이 갈수록 증가, 인력 유용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커

- 대내외적 정치 불안,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환경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 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력 운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 4,000명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근로자 1,962만 7,000명의 32.8%에 해당하는 수치로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조직 내 비정규직의 증가는 현재의 작업 상황에 적합한 기술사용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조직에 대한 낮은 애착, 높은 이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심각성은 OECD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비정규직 이 동성 국가별 비교(2013)’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비정규직의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OECD 16개 국가의 평균이 35.7%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위상 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건설업 비정규직, 조직에 대한 애착심 낮고, 이직 의도는 높게 나타나

- 건설업의 경우 대표 고용 산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타 산업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건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75만 9,000명으로 전체 건설업 근로자 146만 2,000명의 51.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이는 같은 해 3월 전체 건설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50.0%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로 기업이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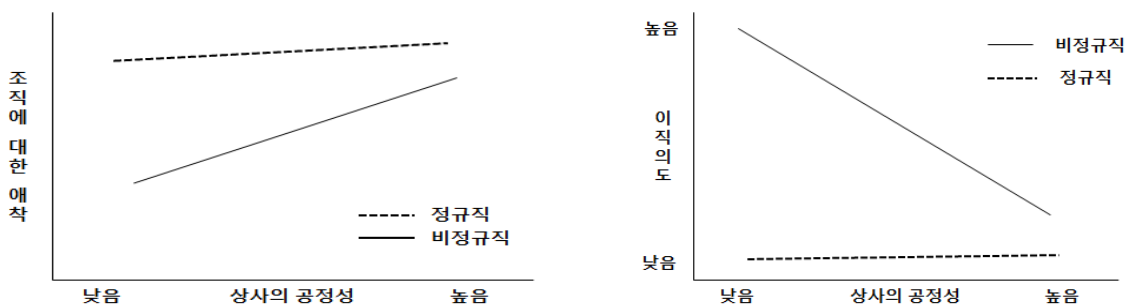
시한 결과¹⁾,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보다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 의도’는 정규직 근로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 조사 결과(5점 만점 기준), ‘조직에 대한 애착’은 정규직 근로자가 평균 3.5점으로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2.9점으로 낮게 나타남.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또한,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3.6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3.2점 보다 높게 나타남.
- 한편, 조직을 언제든지 떠날 잠재적 가능성인 ‘이직 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3.0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2.4점 보다 높게 나타남.

■ 조직 내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구성원에 대한 상사의 공정성’ 중요해

- 종합해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조직 차원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설문 조사에서는 ‘구성원이 상사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한 공정성’의 효과를 살펴봄.
- 그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구성원에 대한 상사의 공정성’은 정규직 근로자 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people business’라 불리는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스스로가 조직 내에서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멤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 구성원에 대한 상사의 공정성이 고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시일 내에 고용 구조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조직 내에서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1) 본 설문 조사는 32개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504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227명(45.0%), 정규직 근로자는 277명(55.0%)임.

건설기업 정도 경영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실천 과제

- 건설기업의 정도경영 실현을 위한 건설기업과 정부 등의 역할 -

■ 최근 정도경영 이슈와 건설산업

- 지난해 9월, 소위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정도 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음.
 -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학교 및 언론 등과 기업 활동과는 불과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다양한 대응 활동을 추진 중임.
- ‘김영란법’ 제정의 배경에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윤리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시대적 요구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건설산업은 여러 산업들 중에서도 부정부패 등에 취약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업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실천이 요구됨.

■ 건설기업의 정도 경영 추진 활동의 공과(功過)

- 이러한 요구에 따라 건설기업들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 빠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정도 경영 시스템 구축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음. 또한, 2000년대 후반 ‘공정거래자율 준수프로그램(CP)’ 도입도 적극 추진해왔음.
- 최근에는 세계적인 정도 경영 인증 프로그램인 ‘다운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UN 글로벌 컴팩트’, ‘ISO 26000’ 등을 취득하는 건설기업들도 많음.
- 그러나 이렇게 건설기업의 정도 경영 추진이 20여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함.
 - 뇌물 수수, 명의 대여 등 업무 과실, 담합, 불공정하도급행위 등 각종 준법불이행 사례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건설기업 정도 경영의 필요성

- 이렇게 건설업계에 정도 경영이 전파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지 못한 원인은 건설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뿐만이 아닌 정책·제도적 요인 등 다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 내 비윤리적인 문화의 일차적 피해자는 건설기업이기 때문에 정도 경영의 강력한 실천은 필수적임.

■ 건설기업의 정도 경영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 건설기업 내 정도 경영을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가 있음.
 - 첫째, 정도 경영은 단기간에 기업 내부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 경영 실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반적인 정도 경영 프로그램을 답습하기 보다는 건설산업의 특성과 우리 기업의 여건을 부합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 리더들의 리더십과 추진의지가 중요함. 특히, 건설기업은 전통적인 생산과정에서의 상명하복의 문화가 크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임원 및 현장관리자 등 관리자들의 정도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추진 의지가 중요함.
 - 셋째, 정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 운영 시스템 / 실행 방안 등을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과 같이 대외적인 거래 및 협력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건설기업의 정도 경영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등 인프라, 효과적인 정도 경영 운영 시스템, 각종 업무 및 제도와 연계한 실행 방안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 넷째, 기업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의 확보임. 궁극적으로 정도 경영의 실현은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문화적인 요소 즉, 정신적인 요소(추진 의지, 교육 등), 시각적인 요소(캠페인, 정도경영현장 등의 실천 운동) 그리고 행동적인 요소(매뉴얼, 정도경영활동 평가 등)를 함께 고려해야 함.
 - 다섯째,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건설기업은 속성 상 정책·제도적인 환경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부와 발주자 등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도 경영 실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건설현장소장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한 연구²⁾를 보면, 현장소장들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개인의 도덕적인 수준보다는 건설기업 내 정도 경영 시스템의 구축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건설기업들이 정도 경영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할수록 관리자들과의 업무상에서 비윤리적인 활동을 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도 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2) 김영덕, '건설현장관리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013.

건설사 희비 가르는 해외 플랜트 미청구공사

최근 해외건설의 극심한 수주 부진과 더불어 잠재적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중심에는 건설기업들이 보유한 미청구공사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건설기업의 미청구공사는 수조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플랜트 사업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부실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미청구공사란 무엇이며 왜 대형 플랜트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일까?

미청구공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용어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자. 미청구공사란 업체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업체가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과 발주자가 기성을 인정하는 시점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발주자가 판단하는 공사 진척도보다 업체 인식이 빠른 경우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사업 비중이 큰 건설기업일수록 미청구공사 발생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사전 제작이 필요한 기자재 비중이 높은 플랜트 사업, 마일스톤 계약 방식의 해외사업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계약 조건이 착공과 동시에 공사 금액의 20%, 전체 공정률이 50% 시점에 이르렀을 때 공사 금액의

60%, 완공 시 나머지 20%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업체는 명시된 마일스톤에 이르기 전까지는 발주자에게 대금 청구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개별 사업의 특성, 계약의 조건, 심지어는 발주자의 내·외부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정상적인 미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의 예정 원가가 지나치게 낮거나 완공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투입이 지속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해외 사업의 미청구공사의 발생이 모두 부실로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은 오류다.

1965년 해외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우리나라는 50년이 넘는 기간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해 지금의 성과를 거뒀다. 유가 하락 등의 악조건과 치열해지는 수주 경쟁 등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해외 저가 수주로 홍역을 치른 국내 건설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부실한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선별 수주로 내실을 다져왔다. 국내 기업들이 특유의 도전 정신을 앞세워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다시 한국 건설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해 본다. <조선일보, 2017. 2. 20>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